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의** : 문화관광연구부 장세길 연구위원
(063-280-7173, 010-3246-4824)
- **담당실장**: 연구실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보도시점 : 2018년 5월 29일(화)부터

전북형 사람이 있는 문화자치시대 준비하자!

**문화비전2030, 문화자치 최초 정책화...문화재정 근본대책 누락
지역 차원의 문화자치 제도·재정·추진체계 및 역량 필요**
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이슈브리핑(170호)을 통해 지난 5월 16일에 발표된 문화재인정부의 '문화비전 2030'(이하 문화비전)에 최초로 문화자치 및 문화분권이 정책화되었지만, 문화자치의 핵심인 문화재정의 근본대책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.
- 장세길 박사는 이번 문화비전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전락한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대신 문화의 가치로 사회를 혁신하는 '사람이 있는 문화'와 중앙·관 중심의 문화정책의 권한을 지역·민간으로 이양하는 '문화자치'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.
- 하지만 장박사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예술계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이번 문화비전에 예술가의 자율성과 성 평등성이 강조된 반면, 다른 분야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꼬집었다.
- 특히 장박사는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문화 분야의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고, 문화예산의 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환에 따라 문화사업의 상대적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

역의 문화재정을 해결하는 방안이 이번 비전에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.

- 그러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문화자치의 선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,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50%를 겨우 넘는 현실에서 문화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화자치가 요원할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사업이 축소되어 문화적 불균형이 심화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.
- 장박사는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국가의 문화재정 해소방안을 요구하면서, 문화자치시대가 도래한 만큼 ‘전북형 사람이 있는 문화자치’를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- 그는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의 과제로 세 가지(제도, 재정, 추진체계 및 역량)를 제안했다.
- 첫째, 정책 환경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중복문제를 해소하고, 문화자치를 총괄하는 최상위 조례로서 가칭 「전라북도 문화자치 기본조례」를 비롯하여 정책영역별 하위조례를 제정하는 등 조례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.
- 둘째, 문화재정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역에 이양하면 타 분야와의 예산확보경쟁으로 지역의 문화 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므로, 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보(예, 지역문화 특별회계) 및 문화재정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.
- 셋째, 문화자치 생태계는 민간역량이 중요하므로 문화재단 중심의 현 사업추진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재단·민간으로 이원화 하는 전략이 요구되며, 문화자치를 목표로 삼은 ‘전북형 사람이 있는 문화 계획’(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) 수립과 함께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